

“올해 UHD 상용화 로드맵 발표” 700MHz 대역 주파수는 여전히 미정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UHD 방송 활성화 논의 경과보고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UHD 상용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거친 UHD 방송추진협의체의 결과를 발표하며 3개 분과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다만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위해 구성된 연구반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UHD 협의체 3개 분과 중 지상파 분과는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며,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의 80%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상파 UH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배정하고 전송방식을 표준화해 달

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상파 분과의 주장은 무료 보편적 UHD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상파 UHD 전송방식 표준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TTA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월 KBS를 방문해 UHDTV 시연을 참관하며 지상파 UHD 표준 정합모델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분과는 4월 10일 케이블 UHD 상용화에 집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유료방송 분과는 UHD 기술기준이 정해진 만큼 당장 본방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과는 ‘올프론 펀드’를 통한 UHD 콘텐츠 수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프론 펀드의 경우 콘텐츠가 부족한 유료방송 UHD ‘측면’ 지원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동시에 방통위는 UHD 협의체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의 활동경과도 발표했다. 해당 주파수는 무료 보편적 UHD 방송을 이유로 할당을 원하는 지상파와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통신이 할당을 원하면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방통위 라봉하 기조실장은 “전문가의 의견과 공개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700MHz 대역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 2월 김대희 상임위원이 창조경제 분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이 올해를 넘길 확률이 있다”고 밝혔던 부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와 지상파 UHD 상용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든 플랫폼의 UHD 상용화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방통위가 막상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UHD 상용화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 지상파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전체 UHD 상용화 계획에서는 모바일 광케로 플랜 2.0에 입각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사실상 지상파 UHD 상용화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최성준 판사,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 의외의 인선…도대체 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경질하고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말 그대로 ‘갑작’ 발탁’이다. 방통위원장에 법조인이 내정된 것은 처음인데다 최근 가까스로 연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이 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배경을 두고 많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 25일 2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으나 편의상 본지 187호에서는 2기와 3기 모두 병용표기 합니다]

당초 이경재 위원장은 연임이 확정적인 상태였다. 임기 내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재신임에 미적대는 분위기만 연출했다. 최근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후임에 강병규 2차관이 신속하게 임명장을 받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후에는 단 6일 만에 이주영 장관이 내정되는 등 현 정부의 인사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었지만 유독 이 위원장의 연임결정은 차일피일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위원장 하마평이 무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내정되기 불과 며칠 전, 정가에서는 3기 방통위 출범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한 번 통과했던 이 위원장이 재차 연임할 것이라는 설이 무성했다. 어차피 늦어진 위원

장 인선으로 3기 방통위원장의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연임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선택은 사실상 이 위원장 경질, 그리고 최성준 내정자의 위원장 발탁이었다. 이에 3월 1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이 위원장은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가 재신임을 강력하게 바라며 의욕을 보였지만 ‘생명연장’을 위한 최종승인은 받아내지 못한 셈이다.

동시에 정가에서는 이 위원장의 낙마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임시국회 정국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하는 난국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합의에 이전의 여지가 없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면서 낙점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KBS 앵커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책하자 “KBS 윤리강령에 위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부분도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최성준 내정자의 위원장 내정을 두고도 정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최성준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조인이기 때문이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성명서]

종편, 케이블 방송 특혜 8VSB 추진을 반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어제(3.11.) 케이블 TV에 대한 8VSB 변조방식을 허용했다.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정신이 팔려 무료 보편의 미디어 플랫폼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포함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케이블 TV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

8VSB 허용은 ‘고화질’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종합편성채널에 주어진 또 하나의 특혜다. 그리고 종편은 케이블 TV에 대한 8VSB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미래부를 압박해 왔다. 이들은 모기업인 보수 신문을 통해 끊임없이 여론몰이를 벌이면서 8VSB 허용을 주장해 왔다. 심지어 8VSB 허용이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불러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공격했다.

2월 임시국회 정국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협박하던 종편을 상기해 보라.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편파, 왜곡, 저질방송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천박함과 저속함을 가진 자들이다. 3월 11일,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을 통한 생명연장을 시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여한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

2012년 12월 31일부터 대한민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의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TV는 8VSB 허용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

라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종편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화질만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8VSB 허용의 폐해는 유료방송 저가화 및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래부가 8VSB 허용을 추진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닌, 종편에 굴종하며 순응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3월 11일 미래부는 8VSB 허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지상파 UHD 실험국 승인도 발표했다. 하지만 지상파 UHD 실험방송은 말 그대로 ‘실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미래부가 지상파 UHD의 필수 전제조건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과 이번 실험방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 이르러 미래부에 묻고 싶다. 시청자의 고화질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종편 및 케이블 TV 특혜,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 등을 야기하는 8VSB 허용을 추진하면서 왜 무료 보편의 지상파 UHD 상용화에는 미온적인가.

경고한다. 시청자 복지를 위한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가 종편과 케이블 방송사의 ‘주구’가 아니라면, 8VSB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2014년 3월 12일
방송인총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설

종편 재승인, 부정권 권력의 산물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통과,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저질, 막말, 편파, 왜곡으로 대한민국 방송언론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종합편성채널방송에 대한 재승인이 결국 최종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편 방송사업자는 출범 당시의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보도 편성 비율은 높이고 투자 규모는 줄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구성 3:2의 비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여당 편파적인 재승인 심사위원들로 채웠고 심사위원장도 종편과 관련이 깊은 인사를 뽑았으니 말 다했다. 게다가 재승인 심사 항목도 대부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항목이 많았으니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종편은 아기와 같으니 잘 보살피 줘야 한다”는 말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던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송괴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져본 신청을 내는 방안과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야당 상임위원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종편 재승인은 현 정권의 패착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재승인을 통과한 배경은 현 정권의 집요하고 치밀한 방송장악 의지가 핵심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일본 자민당 체제와 같은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라고 지적한다. 굳이 총칼의 위협이 없어도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우민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 그 자체로 영구집권의 발판이 만들어 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바로 종편이 있다. 종편은 저속하고 수준 낮은 방송을 통해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한편, 교묘한 왜곡방송으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들에게 ‘재승인’이라는 생명연장을 보장해준 저의가 무엇이었는가.

종편 재승인,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개국 당시부터 각종 특혜로 점철된 종편은 최근 1사 1웹 미디어렐 설치와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을 발판삼아 완벽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재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는 만큼 종편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당장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종합편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권의 홍보역할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재승인 심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파악해 심사 과정의 불법적, 탈법적 요인을 따져야 한다. 더 이상 신규 매체라는 이유로 묻지마 재승인, 황금채널 배정, 의무재전송 지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특혜를 용인해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괴물이다.

위성으로 지상파 UHD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UHD 상용화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도중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경매대금을 통해 위성을 제작하여 해당 위성을 통해 지상파 UHD를 실시하자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홍 상임위원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다. 우선 방송발전의 흐름이 HD에서 UHD로 흘러간다는 전제로 보면, 추후 UHD가 일상적인 방송의 현상으로 인식될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UHD를 위성으로 방송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현재 지상파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 동시에 기존 아날로그 방송용 안테나인 VHF가 디지털 방송용 안테나인 UHF로 빠르게 대체되는 중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UHF 안테나 보급현황을 산출해보면 공정 시설을 포함해 약 1,500만 가구가 UHF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지상파 UHD를 위성으로 방송하게 되면 새로운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1,500만에 육박하는 UHF 안테나는 최초 HD 방송 시절에만 위력을 발휘할 뿐, 추후 UHD로 완전히 방송의 패러다임이 변경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게다가 위성방송은 셋톱박스를 전제로 한다. 엄청난 물량의 UHF 안테나를 무시하고 새로운 위성 안테나와 셋톱박스를 통해 지상파 본연의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성방송이 지상파와 같은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기능을 원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재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위성 안테나는 남쪽으로 향해 있으며 땅에서 하늘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올라와 있다. 위성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려면 ‘반드시’ 해당 각도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건물이 안테나 방향으로 서 있으면 ‘안테나 남쪽 방향, 45도 각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하재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위성방송은 25% 정도로 추정되는 ‘절대 난시정 지역’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방송으로 지상파와 같은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위성의 내구연한도 지속적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게다가 위성방송을 기반으로 지상파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지상파의 재난 방송 역할론’도 흔들린다. 이에 하재현 정책실장은 “위성방송의 경우 ‘레인폴’ 현상이 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방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이라며 “재난방송을 주관해야 하는 지상파가 집중호우 기간에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재현 정책실장은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실시하자 통신할당을 염두에 둔 쪽에서 홍 상임위원의 발언을 기폭제로 ‘플랜 B’를 급부상시키는 분위기”라며 “지상파 UHD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전제로 해야 하며, 빠른 용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UHD 실험방송 계획 나왔다

KBS 66번, MBC 52번, SBS 53번



미래창조과학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세부적인 지상파 UHD 실험방송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에 미래부는 3월 11일 지상파 3사에게 UHD 실험국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각 방송사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6MHz 폭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사 방송망 환경에 맞는 UHD 실험국 시스템을 구축하여 SFN(단일주파수망/방송권역내 모든 송신기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방송망을 구성하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실험과 기술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본 실험방송에서 KBS는 비교적 상위대역인 66번 채널(782MHz~788MHz)을 할당받았다. KBS는 2차에 걸친 UHD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직전 단계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 2차 실험방송 당시 활용했던 관악산 송신소 외에도 남산에 UHD 송신소를 추가로 설치한 상태다. KBS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먼저 실험방송에 돌입하게 된다.

또 2015년 지상파 UHD 본방송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이번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조사와 함께 시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UHD 방송을 준비 중에 있다.

단, 미래부는 KBS가 할당받은 66번이 통신용으로 분배된 대역이나 금년 내 주파수 할당 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구축된 실험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바일 공개로 플랜 2.0에 따르면 이번에는 KBS가 활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통신 상하위 40MHz 폭에 걸쳐 있다.

MBC는 52번 채널(698MHz~704MHz)을 받았다. 이에 MBC는 이번 실험방송을 통해 개국방송을 UHD로 구성할 생각이다. 동시에 MBC는 이번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 새로운 사옥의 최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동원할 복안이며 실제로 5월 초 상암개국 특집방송을 UHD로 송출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SBS는 53번 채널(704MHz~710MHz)을 받았다. 5월 20일 이후로 실험방송을 송출할 예정인 SBS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기점으로 지상파 UHD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악산 송신소는 물론 본사가 위치한 목동에서도 UHD 송신소를 설치했다.

이번 실험방송에서 KBS와 SBS는 기존 송신 사이트 또는 신규 사이트를 활용하여 지상파 UHD의 SFN 구현 테스트를 실시하고, MBC는 1개 채널을 통해 고정 UHD와 이동 HD를 동시에 전송하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지상파 방송사는 4k 60P 실시간 인코더를 적용한 송수신 테스트, 기존 DTV 방송과의 커버리지 및 실내외 수신 특성 비교, 브라질 월드컵 및 인천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방송 실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본 실험방송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미래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 결정은 이번 실험국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700MHz 대역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 후, 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후 논란

중론이다. 방통위가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700MHz 대역 주파수 없는 지상파 UHD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UHD 협의체의 경과보고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UHD 상용화 계획을 올해

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가득이나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 미디어 플랫폼의 형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미래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말 그대로 ‘실험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각 지상파에 할당된 6MHz 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채널 재배치를 전제로 국민행복 700 플랜을 통해 6MHz 폭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8k시대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파수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전송방식에 대해서 유럽에서 SD를 HD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표준이자, 최근 일부 사업자가 UHD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DVB-T2(유럽방식)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2015년 말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제정을 목표로 하는 ATSC 3.0(미국방식)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 전송방식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ATSC 3.0보다는 DVB-T2를 활용하는 것에 대응적인 공간대를 형성한 만큼, 추후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0년 중반 디지털 전송방식 결정 당시처럼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행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미래부는 지상파 UHD 실험국 승인에 따른 실험방송 실시와 더불어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도 같은 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미래부의 ‘절묘한 타이밍’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처럼 각 사업자별 선물 세트를 나눠주는 정책으로 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안에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상파가 UHD 실험방송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미루는 것은 보편적 UHD 환경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통합 방송법 추진, 후폭풍은 없나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이어 직사채널 논란까지

방송법과 IPTV법이 합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IPTV법 통합 및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3월 12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전제로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협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반은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향후 연구반은 연내 확정적인 제정을 목표로 방송법-IPTV법을 통합한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반 운영 외에도 학계, 시청자 단체, 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 제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틀 안에서 무리한 수평규제를 추구하는 점은 잠재적 불안요소다. 물론 통합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기존 방송법에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IPTV만 따로 법을 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수평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공적 미디어 플랫폼의 형해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방송법이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기조로 추진될 경우 매체별 특성이 다른 방송 사업자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통합 방송법이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기조 아래 ‘전반적 완화’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지상파-케이블-IPTV 등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이 충돌해 각자의 이권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통합 방송법이 ‘모든 규제

를 모든 사업자에게 풀어주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와 결을 함께 한다. 그 단적인 사례가 IPTV의 직접사용채널 논란이다. 당초 IPTV는 IPTV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직사채널을 요구했으나 수많은 반대에 직면해 포기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자신들도 직사채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IPTV 사업자들이 주요 임원사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IPTV가 지상파 등의 선거광고와 방송연설을 그대로 재전송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물론 이는 IPTV가 직사채널을 가지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IPTV는 수평규제에 입각해 전격적으로 IPTV 직사채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민주당 논평)

☞3월 14일 최성준 판사의 방통위원장 내정 직후…적절한 용병술인가, 아니면 온리 법조인 사랑?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기간별로 무엇을 점검할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니겠나”(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관련 전체회의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함께…야당 상임위원을 거수기로 만드나?

UHD, 중국을 주목하라

강력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UHD-TV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세계 UHD-TV 출하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는 지난해 세계 UHD LCD TV 출하량이 160만을 돌파한 가운데 4분기에만 100만 대가 집중됐으며, 이는 중국 시장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UHD-TV 출하량만 봐도 4분기에 100만 대가 출하된 상황에서 약 80%가 중국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 5%, 서유럽 4%, 일본 3%, 아시아·태평양 2%, 남미 1%, 동유럽 1%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다.

현재 중국은 UHD-TV 진화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성능에 방점을 찍은 UHD-TV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사이 중국은 저가형 UHD-TV를 무기로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UHD-TV 시장 점유율 중 1위부터 5위는 모두 중국 제조사들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막강한 내수 시장이 세계적인 비율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인 만큼, 중국 내부에서 UHD-TV 점유율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세계 UHD-TV 점유율도 상승한다는 뜻이다. 중국 외 세계 1위 UHD-TV 점유율을 수상하고 있는 일본의 소니와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제조사들이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UHD-TV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제 UHD-TV 패들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기타 산업적 유효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점은 제조사의 입장으로 볼 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물론 ‘상용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UHD-TV 업계의 미래는 상당히 밝은 편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동한	편집주간 이성의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안창준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전&홍성프린원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8VSB 허용, 쏟아지는 비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천명하자 방송 현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

3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논란이 되던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TV를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별도의 작업이 없어도 고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TV를 가진 아날로그 가입자는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방침’은 ‘전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빠르고 기민했다. 이는 지난해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8VSB 상용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지만 이에 당사자의 반발이 상당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늦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8VSB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기간 및 케이블 MSO의 상품 구성과 약관승인, 시설 변경허가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도 이와 결을 함께 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정부의 편향된 방송정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인총연합회의 반발도 주효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은 8VSB 허용이 추진된다고 해도 여전히 심각한 결격사유로 남을 전망이다. 여기에 케이블 MMS 현실화와 지상파 MMS가 상충되는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형해화라는 점에서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DtoA 컨버터 비용을 아우르는 막대한 초기 사업비도 변수로 부각된다. 미래부가 컨버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

자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된 CPS 논쟁도 뇌관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등 특정사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미래부의 결정을 반박했다. 언론연대는 “미래부는 8VSB 허용으로) 시청자 복지의 핵심인 다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기반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뻔히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현업인으로 구성된 방송인총연합회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연합회는 “8VSB 허용은 ‘고화질’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종합편성채널에 주어진 또 하나의 특혜”라며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을 통한 생명연장을 시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어이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케이블 MSO는 8VSB 허용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종편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화질만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보편적 미디어 정책인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말 그대로 ‘실험’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청자의 고화질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종편 및 케이블 TV 특혜,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 등을 야기하는 8VSB 허용을 추진하면서 왜 무료 보편의 지상파 UHD 상용화에는 미온적인가”라고 되물었다.

물론 미래부는 3월 11일 발표를 통해 8VSB 허용을 천명하며 이용자의 시청권 보호와 PP의 인위적 퇴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의 상품별 채널수와 요금을 그대로 8VSB 상품에 대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시청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컨버터 교체 비용은 전적으로 케이블 MSO의 몫이다. 다만 해당 비용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처럼,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료방송, 특히 케이블 MSO는 지난해 10월부터 10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지역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2017년에는 모든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0%에 해당되는 단체 계약자에게 8VSB를 임시방편으로 허용하여 목표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즉, 케이블 MSO는 8VSB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과도기며, 불분명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일종으로 해석한 격이다.

앞으로 8VSB 허용이 케이블 MSO와 미래부의 바람대로 추진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8VSB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규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분석

독과점, 그리고 무다

몸집 불리는 유료방송, 베네치아에서 배워라

한때 ‘지중해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물의 도시’ 베네치아 공화국은 상인의 나라답게 체계적이고 정교한 상업 시스템을 완성해 냈다. 특히 베네치아 공화국 정부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바다를 항해하는 국유선단에 정기항로 방식을 접목한 ‘무다’를 끈질기게 고집함으로써 ‘강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지켜왔다. 복식부기를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통화인 ‘두캇’을 서유럽의 통화로 정착시켰으며 강력한 함대를 통해 아드리아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월동력에는 무다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기민한 판단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항로, 플랑드르 항로를 번갈아 개통하며 상인들의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게 만든 무다. 이것이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저력’이었다.

다만 무다의 유지는 엄청나게 힘들다. 일단 시시각각 변하는 각국의 정치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판단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이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무다에 집착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바로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무다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우선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다의 국유선단을 균한인 갈리선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제고했고, 수송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상선에 짐을 싣도록 했다. 여기에 낙찰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무다의 국유선단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낙찰받은 사람은 수송료의 상한과 하한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다. 게다가 각각의 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선단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였다. 이 제도는 재력이 뛰어난 대상인의 독주를 막고 해외무역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훌륭한 방안이었다.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결국

(1면에 이어)지금까지 최시중 전 위원장과 이경재 위원장이 기자, 이계철 전 위원장이 통신전문가로서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인 최 내정자는 상당한 이질감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내린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세 정부 주요 보직을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채웠다. 후후 ‘행정부의 법조인 빼가기 논란’이 방통위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관련기사 4면)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3월 13일 밤 전격적으로 이 위원장의 ‘경질’과 최 내정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주도했다는 설도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경재 위원장 경질과 최성준 판사의 내정을 통해 3기 방통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전문성’보다는 ‘판사로서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 내정자가 현직 판사 재직 시절 당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구 정보통신부 유관 단체로 정보화 법제도 개혁에 대한 학술 활동을 주로 했던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고는

은 나라 전체 경제의 경화로 이어지며, 그것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활동이라는 점을 베네치아 공화국은 간파했던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제도로 만든 것이 공화국 정부를 구성하는 대상인이었다는 점도 새롭다.

최근 케이블 MSO 권역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독과점을 경계하며 제동을 걸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부랴부랴 케이블 PP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완화에 이은 거대 유료방송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비대해지고 있다. 당장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고 내년에 발효되는 한미 FTA를 단서로 케이블 MSP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거대 유료방송의 시대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무다’에 주목해야 한다. 고스란히 대입해 보면, 유료방송의 규제완화에 따른 독과점 기업의 등장은 온전히 전체 방송시장의 ‘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쓸모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위정자의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방송만큼은 공공성의 영역이 살아 숨 쉬어야 하는 만큼, 최소한 대응적인 방안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3월 20일 규제완화를 위한 ‘골짜기로’로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새삼 무서워진다. 지난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산업 12개가 늘었다고 발표한 것도 불길하게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하지만 방송통신 경력은 일천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최 판사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후폭풍, KBS 수신료 현실화, 지상파 UHD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미디어 랩 지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3기 방통위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비록 본 사안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도 ‘판사적 감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판사는 정치인보다 인사 청문회를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최 내정자의 경우 자녀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청와대 입장에서든 최 내정자를 낙정한 매력적인 요소로 풀이된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와 협력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최 판사의 ‘감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통위의 스탠스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내정자는 31일 청문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초에 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소식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 4월 교육과정 안내

디지털 신호시스템 관리, 방송시스템설계 실무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원장 문명석)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후원받아 4월부터 KBS수원센터 인제개발원 1층 방송기술교육원에서 2014년도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본 교육원은 ‘미래미디어 방송기술 창의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인 ‘지상파 방송기술인 재교육’을 통해 방송기술인 직무능력 향상과 차세대 방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실시하는 ‘디지털 신호시스템 관리(1차)’ 교육은 디지털 비디오 장비 동작 원리의 이해, 방송제작시스템 코덱별 품질 비교,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종류와 기본구조 등을 교육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용을 갖췄다. 판사 출신 최성준 위원장 내정자가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5일 청와대는 마지막 남은 상임위원에 이기주 인터넷진흥원장을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허원제 상임위원을 바탕으로 3기 방통위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이 상임위원은 1959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통신정책학 석사 및 정책학 박사를 졸업했다.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통신방송정책분야 전문가로 여겨진다. 1기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에서는 기조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김연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했다.

이 상임위원의 합류로 이제 3기 방통위는 완전

히 구성됐다. 그러나 출발부터 빠जे거리는 분위기다. 최성준 내정자를 둘러싼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 및 자녀 세금탈루 의혹, 법조인 빼가기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의 자격미달 논란도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삼석 상임위원을 둘러싼 자격미달 논란은 25일 방통위가 전격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원제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과 더불어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방통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사유는 고 상임위원의 경력부족 논란때문이다. 고 상임위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년 4개월), 입법 보조원(2년 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 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 객원교수(1년 10개월) 등의 경력이 있는데, 법제처는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서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된 이상 부적격 논란 자체가 ‘흔들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당이 재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가 따로 추천 권한을 뒀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뒤집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31일 예정된 최성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 상임위원의 자격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진용 갖춘 3기 방통위, 시작부터 삐걱

700MHz 주파수 보상경매 시나리오 ‘술술’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아”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할당전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파수 보상경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주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시나리오가 현실적 대안 찾이라는 명목으로 논리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주파수 보상경매는 주파수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통신용으로 재할당하는 개념이다. 최근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올해 6월로 예정되었던 600~700MHz 대역 주파수(방송채널 20여 개) 재할당을 2015년으로 연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해당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파수를 산정하는 역경매를 진행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다시 경매하는 투트랙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도 대입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파수 보상경매를 우리의 실정에 낄것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상경매는 주파수 역경매 후 방송대역 재배치, 통신사 순경매의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식적으로 ‘회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에 보상경매를 ‘무조건’ 추진하기 보다는 플랜 B의 형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상경매가 어렵다면 그 결과물인 ‘방송사 수익-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금액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상경매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론이 결국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논리를 두고 지상파 UHD의 성장 가능성을 무시하는 한편, 오로지 ‘통신 중심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3면에 이어)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노웅래 사무총장은 3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할 방통위가 마치 거수기, 꼭두각시와 같이 종편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방통위가 마치 공보처와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완벽하게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또 노웅래 사무총장은 “우리는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방통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에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종편 재승인 의결은 무효”라며 “이는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채점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방통위는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심사 배점,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으로 사실상 종편 재승인을 내정했고, 공정한 절차도 없이 오늘 문지마 합격증을 발행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상당하다. 이미 종편국민감시단은 3월 17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던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채널 A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종편 재승인을 반대한다”며 “추후 강력한 시민사회운동을 위해 종편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방송언론현업인을 대표해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월 19일 별도의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온 방통위를 강력 규탄한다.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사무국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종편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며 “종편들은 이제 그동안 누려온 말도 안되는 특혜들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황금제일 배정, 8VSB 허용, 의무재전송, 방통발전기금 면제 등 미디어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파렴치하게 유지해온 온갖 특혜들은 모두 조속히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해직 언론인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해당 문제보다는 엉뚱한 사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해직 언론인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국민분열 조장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2일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욕설·말발 안 하기, 폭력 추방하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게 묻는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배려와 나눔, 나이가 국민대통합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만나 해직언론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7월 해직 언론인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불행을 겪고 있어 가슴 아프다, 나름대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뿐이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해직 언론인을 위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이제 박근혜 정권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대통합’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만2,000 언론 노동자의 투쟁으로, 국민의 힘으로 해직 언론인 복직을 쟁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대전시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가 반영된 HD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섰다. 지역에 특화된 HD 콘텐츠 수급을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고유의 소재 또는 지역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하는 HD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2014 지역특화 HD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서 방송, 영상 제작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및 영상관련 학과의 학교 등 광범위하며 국영화, 다큐멘터리, 기타 영상 제작에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자유 공모로 △국영화(독립영화) 분야는 대전지역 로케이션을 주로 활용한 국영화 △다큐멘터리 분야는 대전 고유의 소재(역사, 문화, 관광, 사건, 인물,

법률 전문가 방통위원장 내정자, 과연? 방송통신 경험 없고, 사법부 독립 훼손까지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깜짝’ 임명됐다. 최 내정자는 이경재 위원장이 경질의 기로에 서서 흔들릴 때 슬그머니 등장한 후보군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 없다. 그야말로 ‘의외의 카드’다. 당장 최 내정자를 발탁한 박심(朴心)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방송통신에 문외한이지만 판사로 재직할 비정치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인의 경우 인사청문회부터 난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을 판사로 살아온 법관은 상대적으로 흠결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파동을 겪으며 부침을 거듭한 현 정권이 이경재 위원장을 경질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현’ 판사를 발탁했다는 분석에 중론이 쏠린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발탁에도 변수는 있다. 우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최 내정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방송통신 비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이 방통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1원칙은 법

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나 법 원칙만 쫓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며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의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 및 통신을 잘 모르지만 판사의 ‘감각’으로 방통위를 훌륭하게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방송통신 업계의 상황은 복잡하다. 미디어어렵, 종편, 700MHz 방송용 필수 주파수 할당 등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첨예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은 극한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내정자의 발탁은 민주당의 논평처럼 “촉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기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또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역사를 통틀어 방송이 이렇게까지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인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및 통신 비전문가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된다.

게다가 ‘법 원칙’을 지나치게 내세우겠다는 최

내정자의 발언에는 ‘위험한 냄새’가 난다. 비록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방송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만큼 위험하다. 이런 우려는 몇몇 언론을 통해서도 읽힌다. 물론 융통성을 가지겠다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 융통성이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긍정적인 인 피드백을 일으킬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중잣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 내정자가 판사적 감각과 법의 원칙만 내세우며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할 경우 뉴미디어 생태계는 공간정국의 경직성을 닦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최 내정자의 발탁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법관출신의 고위직행은 다반사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행정부의 판료가 되었다. 심지어 최 내정자는 서울고법 행정1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도입한 평생법관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선순환 권력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어지러운 국회 미방위 언론노조, “박대출 의원 규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 ‘제로’를 기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각 소위를 열어 수평선을 달리더니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하고 말았다.

국회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 위해 물밑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시에 여야는 각각 소위를 따로 열어 두 개의 법안을 논하는 기이한 행태도 보였다.

그러던 중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미방위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여당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은 3월 20일 국회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

원과 4명의 여당 의원을 모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한편, 긴급하게 야당 의원들을 찾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 5:5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의 법안처리는 실패했고, 결국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인질구조에 원자력법이 묶여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것은 입법부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에만 몰두하는 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그 중심인물로 박대출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이에 언론노조는 여당과 박 의원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

통령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다른 미방위 법안들은 제쳐 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처리하자는 뺄뺄스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게는 방송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체면만 중요하던 말인가.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란 말인가”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미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종편이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자 여당 의원들은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처리하자는 논리를 들고 나서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구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편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좌초됐다. 여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을 감안해 빠른 처리를 원했으나 24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기점으로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과 그 외 ICT를 포함한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에 미래부는 이번 1차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해당부처와 공동으로 과제 기획 발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약 170여개 과제 풀을 심층 검토하여 비타민 성격 부합성, 사회적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23개 과제(600억 원 규모)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비타민 사업의 중점 적용대상인 7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재해 걱정없는 ‘미(米)리알림’, 제값 주고 제값 받는 농산물 산지 직거래 서비스, 수상로봇 이용 해파리 퇴치 서비스 등 5개 과제와 문화 관광 및 교육 학습 분야에서는 IoT 기반 내손안의 관광, 네트워크형 원격 스마트 과학교실 등 2개 과제로 수렴된다. 또 보건 의료 영역에서는 한국형 언제 어디서나 My 병원(산재병원 대상 시범), 마약류 의약품 지키미 서비스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주력 전통산업에서 차세대 향해 안전 e-Navigation, e-Building care 서비스, 새는 전기요금 잡아 주는 상수도 펌프 관리, 믿고 찾는 착한 주유소, 등 5개 과제와 소상공인 상생방안에서 e-특허 하나로 서비스, 전통 재래시장 원터치 쇼핑, 3D 프린팅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전소 등 4개 과제, 마지막으로 최근 국발 미세먼지 파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재난 영역에서 재해 재난SOC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국토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등 5개 과제다. 미래부는 연내 추가적으로 진행될 2차 과제는 1차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융합 신산업’ 창출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Bottom-up 공모 외 Top-down 기획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타민’으로서의 대표성 및 상징성 있는 대형 Flagship project 발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서진 soejin@kobet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홍보협력담당관을 공직 내외부를 막론하고 공개모집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홍보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통상협상 관련, 대언론 홍보·취재 지원, 언론보도 분석·평가,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3월 28일까지고 공무원,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일정기간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에 대하여는 4월 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상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02-2110-1304)로 연락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인터넷정부 나라일터 인터넷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명소, 축제 등)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기타 분야로는 이외에 50분 내외로 제작이 가능한 HD급 영상 콘텐츠 분야이다. 사업신청은 이번 달 28일까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부(479-4122)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jacts.kr)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3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SI/NI업체·네트워크 장비 산업계 대표들과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실천방안은 지난해 8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중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산 네트워크 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네트워크 장비산업 특성이 글로벌 기업 중심의 시장 형성, 국내 장비업체의 중소기업 위주, 각 산업 주체 간 협력 기반 미흡 등으로 국내 네트워크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경우 투자여력 부족, 품질 보증기반 취약, 글로벌 업체의 국내 시장 공세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마련한 실천방안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2017년까지 네트워크 산업 전반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국산장비의 품질 제고 및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국산장비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전략기기를 대상으로 수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국내 업체가 장점을 가진 경쟁력 있는 전략기술을 집중 개발해 나감으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정 mjikang@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산업 및 사회이슈에 접목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2014년도 1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현 정부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우리가 장점을 가진 과학기술과 ICT라는 ‘비타민’을 통해 각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연관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 사업이다. 이

국내외 방송업계의 화두, CPS

CPS, 즉 재송신료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으로

디지털 전환의 확고한 정의내리기가 선행되는 가운데 CPS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국외의 경우 에어리오의 등장으로 CPS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국내] 8VSB 도입과 CPS 논란

디지털 전환과 CPS 부과대상의 경계



[작년 10월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한 8VSB 반대 및 올바른 방송정책 촉구 기자회견]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천명하며 관련 업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종합편성채널 특혜시비와 더불어 유료방송 저가화, 짝퉁 디지털 전환 논란 등 관련 반발이 상당하다.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즉각 미래부의 결정을 비판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위시한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부의 8VSB 허용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소동을 지켜보는 케이블 업계의 마음도 불편하다. 케이블 MSO 입장에서 8VSB 허용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IPTV에 대응해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를 지켜내는 보

루로 여겨지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살펴보면 상황이 마냥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케이블 MSO의 입장에서 8VSB 허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입자 방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게다가 흡소품 송출료 수익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고화질을 담보하는 8VSB 허용은 케이블 MSO의 수익증대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성이다. 우선 8VSB 허용에 있어 미래부는 채널 구성 및 상품의 가격을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명시했다. 당장 미래부의 정책이



[작년 10월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한 8VSB 반대 및 올바른 방송정책 촉구 기자회견]

직접적인 케이블 MSO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아날로그 TV를 가진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의 경우 컨버터를 설치해야만 TV 시청을 할 수 있는데 미래부는 케이블 MSO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한 대에 4~6만 원에 달하는 컨버터 비용을 고스란히 케이블 MSO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초기 사업비가 문제인 셈이다.

게다가 현재 케이블 MSO는 대외적으로 8VSB 허용이 클리어함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일종이거나, 혹은 과도기의 통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8VSB 상품에 묶여 디지털 전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무시하는 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첨예하게 얽혔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CPS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 M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만 CPS를 납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VSB 상품이 케이블 MSO의 주장대로 '디지털'이라면 당연히 CPS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케이블 MSO들은 "8VSB에 CPS를 과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8VSB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인상이 거의 없어 CPS를 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상파가 8VSB 도입을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채널에 CPS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지상파가 8VSB 채널에 CPS를 과금하려 한다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MSO들의 8VSB 대상 채널에 대한 CPS 과금 불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허용이 방송산업발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상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8VSB 허용은 케이블 MMS의 성격을 가지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공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 아무리 온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으나 정부와 케이블 MSO, 종편은 '디지털 전환이 맞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을 실시했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8VSB 추진을 기어 이 실시한다면 CPS 과금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8VSB 허용의 여파는 어떻게 될까. 당장 엄청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우선 대부분의 5대 케이블 MSO가 디지털 전환에 있어 나름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8VSB 허용은 일종의 '미끼상품'의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종편특혜의 경우 군소 PP 퇴출이라는 극단적 사태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고화질에 집중된 특혜논란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컨버터 비용과 CPS 과금 문제를 아우르는 논란이 심해질수록 8VSB 정책은 그 자체가 동력상실의 미로에 빠질 확률이 높다.

당장 미래부가 케이블 MSO의 실질적 이득 조금, 종편의 약소한 특혜, 다른 방송 사업자의 반발이라는 '결과물'을 위해 유료방송 저가화, 짝퉁 디지털 전환 논란,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형해화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국외] 에어리오, CPS의 근간을 흔드나

美 지상파 반발, 연방대법원 심리 주목

OTT 등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이종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디어 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리오'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폴렉' 사태까지 일으키는 소동으로 뉴욕을 포함한 총 22개 도시로 권역을 넓힌 에어리오는 기존 케이블 방송 가입비의 10%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3,0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리오 서비스가 지상파 방송사의 CPS 논란과 맞물리며 사업자 간 이전투구 양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지상파 방송의 신호를 받아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 후,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임대해 방송을 수신하게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종 OTT'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다는 것과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를 납부하지 않는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의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CPS 부과 대상이지만, 에어리오는 안테나를 개별적으로 설치해 지상파의 신호를 받는 것은 무료라는 미국 현행법을 활용해 CPS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ABC, CBS, NBC 등 대형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할 경우 자신들의 지상파 채널을 케이블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지상파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극한 발언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엇갈린 상황이다. 2013년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2014년 2월 유타주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지상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연방법원의 심리는 1심과 2심 모두 에어리오가 승소했다. 4월 22일 연방대법원 심리에 온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국내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차세대 PVR 서비스인 SOD(SkyLife on Demand : 스카이라이프 온 디맨드)를 준비하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SOD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클라우드를 비롯해 USB 메모리와 외장 HDD에 자유롭게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모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녹화하고 원하는 때에 재생해 볼 수 있는 개인 녹화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SOD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은 변수로 꼽히고 있다. HD급 고화질 방송을 녹화하는 것 외에도 USB 단자를

통한 디스크 저장은 물론, 클라우드 저장까지 지원하는 부분과(저장용량에 한계가 있는 하드디스크 PVR과 달리 원격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한 없는 저장용량을 가진다)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 녹화기능도 구비하는 대목이 저작권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SOD는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제공해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콘텐츠 시청 및 저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SOD는 다른 유료방송처럼 자신들이 CPS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든 구독원리가 전적으로 '가입자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에어리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SOD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입자에게 소형 안테나를 제공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 및 접근은 안테나를 받은 가입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에어리오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SOD에 대해 KT 스카이라이프가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청 및 저장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개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결을 함께 한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은 사적이용(private performances)과 공적실연(Public performance)으로 구분된다. 사적이용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콘텐츠를 받아 시청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윤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콘텐츠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실연 행위는 계약에 의거한 저작권 법에 영향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의 주장이 상충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 방송사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공적실연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적

이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개별 안테나-개별 가입자라는 명목상의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상파 방송을 잡아 가입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을 CPS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록 개별 안테나와 개별 가입자의 의지가 사적이용에 해당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해도 '플랫폼'을 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에어리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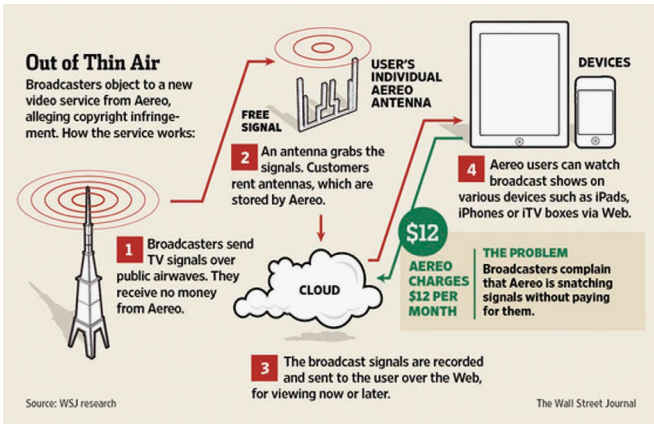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케이블 업체처럼 지상파의 방송을 받아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모델을 단순하게 세분화시켜 가입자 단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미국 현행법의 맹점도 있다. 미국 방송법에는 케이블 사업자에 한해 재송신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에어리오는 사실상 재송신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클라우드 재전송에 대한 '면죄부'를 통해 CPS 부과의 짐을 벗어나려는 에어리오의 앞에 막강한 복병이 나타났다. 백악관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에어리오가 별도 안테나를 이용하더라도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공중들에게 재전송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백악관은 "개발되지 않은 기기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적실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에어리오가 CPS 납부를 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인 개별 안테나-개별 가입자는 규제의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게다가 CPS를 지상파와의 '서비스 수익구조'로 삼고 있는 망사업자들도 에어리오의 주장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점도 변수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에어리오 서비스 지도]

그런데 에어리오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지상파에 CPS

제2의 3.20 사태와 통신의 역할 SKT 6시간 불통

HLR 고장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6시간 통신장애를 일으킨 1위 사업자 SKT의 사례를 바라보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공공의 인프라와 민영의 인프라 차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부분은 색다르다.



한동안 IT업계에서 3월 20일은 끔찍한 재앙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2013년 3월 20일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으로 대한민국은 보안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하고 구축해야 했으며,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상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시도라는 황당한 방송언론 사찰 가능성도 경험해야 했다.

그런데 해를 바꿔 2014년 3월 20일에는 통신이 문제를 일으켰다. 국내 통신사 점유율 1위인 SKT가 무려 6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며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SKT는 2,743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시장 지배자적 사업자다. 게다가 통화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퇴근시간과 겹친 오후 6시였던 관계로 혼란은 더욱 극심해졌다.

SKT의 이해할 수 없는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5시간이 넘는 오후 11시 17

분이 돼서야 “장애에 사과드린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SKT 가입자에게 전화가 걸리지 않자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문제라고 확인한 타사의 고객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문의하자 KT의 경우 오후 7시 26분 “자사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공지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SKT 홍보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들의 전화기 또한 먹통이 되는 바람에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촌극도 벌어졌다. 게다가 SKT가 20일 오후 6시 25분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넘게, 일부 고객은 다음날인 21일까지 전화기가 먹통이 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SKT는 복구가 완료했지만 직후 통화량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재난재해 및 주요 기념일 통화 폭증으로 인한 장애는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빈약한 해명으로 보인다. 물론 SKT는 26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태 조기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성난 고객들의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SKT의 먹통현상은 가입자 위치를 확인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입자 위치 확인 모듈(HLR/Home Location Register)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HLR은 통신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장비로써, 착·발신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어하는 핵심장비다. 이번 ‘대란’은 이 HLR 모듈이 고장났으로써 가입자의 위

치를 기지국이 파악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서로 연결되지 않아 생긴 셈이다. 만약 오후 6시 25분 복구가 완료됐다는 SKT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고장난 HLR이 복구 이후 한꺼번에 재가동을 하면서 몰려 있던 통신신호가 한꺼번에 들어닥쳤다는 뜻이다.

문제는 HLR이 절대 고장나지 말아야 하는 핵심장비라는 것이다. HLR 모듈 고장은 통상적인 전화기 사용 외에도 119 및 비상번호까지 먹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보호해야 한다. 게다가 기지국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기거나 모바일 트래픽이 과부하 현상을 보여 먹통이 되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면 되지만, HLR 모듈이 고장나면 기지국과 가입자 자체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기술의 고장이 전에도 빈번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개막일 당시 HLR 고장으로 일부 국번에 해당되는 SKT가 먹통된 사례가 있으며 2007년에는 KT가, 2011년에는 SKT가 비슷한 고장을 일으켜 각각 3시간과 2시간 동안 전화기 사용이 정지된 적이 있었다.

한편, HLR 고장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6시간 통신장애를 일으킨 1위 사업자 SKT의 사례를 바라보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공공의 인프라와 민영의 인프라 차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부분은 색다르다.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두고 이를 UHD TV 등 난시청 해소를 포함한 보편적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해야 한다는 방송과 모바일 트래픽 해

소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통신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신 일각에서는, 아니 심지어 정부 부처의 일부 고위 공무원조차 방송은 공공의 인프라적 속성을 많이 상실했고, 이제는 통신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주파수를 ‘공익적’ 가치로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도 기억이 선하다. 제주도에서 열린 모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의 모 간부가 발제 도중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소개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말했다. “재난이나 급한 일 있으면 TV를 보지 않고, 모두 휴대폰을 확인하죠?” 이제 공공의 영역은 방송의 전유물이 아니라 통신의 것입니다.”

개인기업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에게 공공의 영역을 억지로 대입했다는 원론적인 비판과 더불어 핵심장비 오류로 인해 무려 6시간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통신사에게 공공의 인프라를 대입했던 모 간부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심히 궁금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방송사가 2~3년에 한 번 조작동을 일으켜 ‘정파’가 되고 심지어 퇴근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황금시간에 6시간 넘게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재승인 과정에서 엄청난 곤혹을 치를 것이다. 당장 방송사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공공의 인프라인 방송에게 ‘흔들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공공이 더 어울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참관기] CCBN 2014를 가다



‘중국 국제 방송 케이블 위성기기 박람회(이하 CCBN, China Content Broadcasting Network)’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CIEC,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됐다.

1993년 첫 문을 연 CCBN은 중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산업의 주요 자산을 관리하는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ARFT,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이 주최하고, 중국 전역의 방송국이 협찬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 중 하나다.

“CCBN, 중국 내수 시장 중심”

하지만 중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최신 장비 기술을 선보이는 KOBA나 NAB, IBC와 같은 방송장비 전시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 8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에 TV, Cable, IPTV, Mobile TV, DMB, Video&Audio, Set top box 등의 장비와 기기를 출품한 업체가 약 1,000개사 달했지만 그 중



90% 정도에 달하는 사업자가 중국 내 사업자인 만큼 CCBN은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전시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SONY와 오디오 업체인 Dolby, 방송 네트워크·서버 업체인 CISCO와 Harmonic, 통신장비 업체인 ARRIS 등 몇몇 업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스는 중국산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방송장비 외의 통신장비들도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방송장비기도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방송 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지 조명이나 음향 쪽 장비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방송장비 기술과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한다.

UHD TV ‘활발’ ... 3DTV ‘시들’

예상대로 이번 CCBN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UHD TV였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부스에서는 너도나도 UHD TV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물론 눈에 띄는 신기술을 내세운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UHD TV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로 뜨거워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UHD TV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UHD TV 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소니 부스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었다. 이미 여러 번 선보인 PMW-55 등을 전시한 소니는 대중화 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였다. 특히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키메라인 PMW-55의 경우 기존 UHD TV 카메라 가격의 1/10 수준으로 4K-cmos를 지원하면서 기존 F65 4K 카메라와 동일한 색 영역을 적용하고 있어 UHD TV 주변을 확대하겠다는 소니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14에서 BCM7364와 BCM7399 다이렉트 방송 위성 칩을 새롭게 선보인 브로드컴은 예약자들만 부스를 구경할 수 있게 통제했다. 지난번 새롭게 선보인 브로드컴의 위성, 케이블, IP 셋탑박스 칩셋은 UHD 콘텐츠가 요구하는 보다 높은 스루풋을 기존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H.265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 지



원 기능을 통합했다. 세계 첫 4Kx2K TV 홈 게이트웨이 칩인 BCM7445를 소개해 UHD 기술을 선도한 바 있는 만큼 UHD 기술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들은 브로드컴의 부스 입장 통제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UHD TV와 달리 3DTV에 대한 관심은 한풀 꺾인 듯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서는 3DTV 열풍이 일 정도로 빠르게 보급됐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번 CCBN 전시장에서는 3DTV 관련 전시 부스가 1~2곳에 불과했다.

이번 CCBN 2014는 60,000 평방미터 면적에 총 8개의 전시관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전시회를 다 돌아보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전시회이다 보니 Brochure와 전시회 신문인 Daily News도 영문판 없이 중국어로만 이뤄져 있고, 각 부스에도 해외 방문객을 위한 영어 설명 없이 중국어로만 설명을 해놓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 내 사업자로만 60,000 평방미터의 면적을 채운 것을 보니 중국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된 2년 전과 달리 KOBA Daily News와 같은 전시회 신문이 새로 생긴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CCBN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한 방송 전문가가 진단했듯이 현재 중국의 방송 기술은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초공사가 다져지고, 건물이 올라가듯이 발전한다면 아마 몇 십 년 후에는 CCBN이 KOBA나 NAB, IBC와 같은 전시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와 미디어 플랫폼의 결합

전 봉 수 한빛미디어연구소 연구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있다.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하딘(G. J. Hardin)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 논문에서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개인 주의적 사리사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주로 경제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 셈이다. 하딘은 이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을 적극적인 사례로 들며 이렇게 설명한다.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즉 그 목초지는 공유지이다. 소 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공유지에 내재된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 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지극히 심리학적인 요소와 경제학적이고 실증적인 현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상의 '비극'이 된다.

공유지의 비극을 내포한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지은

[리믹스]에서 등장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경제를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로 나눴는데 그 경계가 아주 흥미롭다. 우선 상업경제는 단순하다. 돈과 노동,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한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으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지극히 단순하고 논리적이다. 다만 공유경제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돈만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추상적인 경제의 개념을 통한 양극단의 분리는 패러다임적 요소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상업경제와 공유경제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상업경제의 경우 시공간을 파괴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타당성을 가진다. 당장 '아마존'을 보자. 아마존은 시장경제의 기반인 인터넷을 발판으로 엄청난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물론 고객을 위한 세세한 배려와 확고한 서비스 마인드라는 양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존은 상업경제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업경제가 공유경제로 발돋움하는 사례는 인터

넷을 통해 무궁무진한 발전의 비전을 내포한다. 즉, 일차적인 심리학+경제학의 원리에서 상업경제가 파생된다면, 이를 인터넷으로 환치했을 경우 더 고차원적인 공유경제의 비전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는 인터넷 이용자가 만드는 백과사전이며 글, 문단, 문장, 단어, 토씨마다 쓴 사람이 다르다. 누군가 이미 쓴 글을 지우고 고치는 과정에서 위키피디아는 브리태니커 못지 않은 방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키피디아는 빅데이터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스스로 확장해 간다. 이용자가 글자 수만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돈을 받으려고 참여한 것도 아니다. 자발적인 공유지의 확장, 그리고 내부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데이터. 이것이 상업경제에서 벗어난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지금 세계 방송시장은 합종 연횡중이다. MWC 2014에서 망 사업자와 OTT 사업자가 사이좋게 등장해 기조연설을 주고 받는 장면은 확실한 사례다. 게다가 인터넷은 시공간을 파괴하는, 혹은 파괴할 결정적인 단서다. 우리는 이러한

단서의 확장성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은 당연히 방송시장에도 도입된다. 당장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향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유경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에 잔류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넷플릭스가 DVD 대여에서 인터넷 방송 사업자로 전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방송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보다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며, 전파와 IP망, 그 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는, 특히 뉴미디어 플랫폼을 선도하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공유경제의 개념에 바탕을 둔 시장전략이 절실하다. 오픈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내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는 국내 토종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확장성을 바탕으로 정보의 바다로 인도하는 '구글'이 될 것인가. 방송 사업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선택지다.

왜 지상파 UHD인가

지금까지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아직 난시청은 상당한 수준이며,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며 지상파 UHD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다. 보편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당위성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경영을 위임받은 정부는 오로지 공리적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지상파 UHD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사항이기에, 그리고 직접수신율을 끌어 올리는 기발한 방법이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어쩌면 지상파 UHD는 지상파 MMS와 더불어 가장 확실한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을 구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우선 UHDTV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지상파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시청자에게 가

장 친근한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각 가정의 수상기를 교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당연히 산업적인 부흥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는 수신기 판매 확대로 인한 가격인하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보급이 확대된다면 결국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관련 산업의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채 유료매체 우선하여 UHDTV 서비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콘텐츠 활성화의 어려움과 시청자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전반의 도입이 지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디스플레이 장비, 수신기, 셋톱박스, 캠코더 등 관련 산업 제반에 대한 파급효과의 지연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지상파 UHD 인프라에 있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저 디스

플레이에만 집중한 UHD 전략이 주요 제조사를 통해 분출되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인프라는 뒷전이다. 그렇다면 덜 화려한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방송장비 내수시장을 선도하는 지상파가 빠지면 곤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서의 방송 플랫폼의 선택에 앞서 시민으로서 취득해야 할 사회적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무료방송을 통한 우선 도입이 다른 플랫폼에 정책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료방송 위주의 차세대 방송 정책은 시청자의 비용지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자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화질 뉴미디어 플랫폼의 가능성을 가두는 것은 위험하다. 발전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난다. 특정 시청자에게만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을 허락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고화질 미디어 플랫폼의 대중화가 필요한 것이다. 유료방송에서는 UHD방송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

우 정 식 지역미디어발전연대 활동가

하여 고가의 서비스에 가입한 시청자들만 시청 가능한 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DTV 전환과정에서 겪은 바와 같이 수신기 보급 목표에 근거한 도입정책과 지원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 각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목표와 방향이 통일되지 못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지상파 UHD가 DTV의 전철을 따라가면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차세대 방송 서비스 도입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소관부처가 미래부, 방통위로 이원화되면서 체계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양상과 지상파 UHDTV 추진을 위한 첫 단추인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들의 추진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 UHD는 국민의, 시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직수율의 제고만이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 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SONY

OFFICIAL PARTNER



4K

Sony 4K Live Evolution

4K로 만나는 감동의 순간
Beyond Definition

F55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

MVS-8000X
4K 프로덕션 스위처SR-R1000
4K 레코더/스토리지PWS-4400
4K XAVC 서버PVM-X300
4K 프로페셔널 모니터

4K Bravia TV

VPL-VW1100ES/VW500ES
4K 홈 프로젝터SRX-T615
4K 시네마 프로젝터

Sony Korea Corp.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 제품정보 : <http://ps.sony.co.kr> ■ 기술지원 : (국번없이)1588-7313 <http://bpeng.sony.co.kr>
 ■ 대리점 : 서울 • (주)베스코에스아이: (02)716-9722 • (주)지엠에스: (02)2165-8777 • (주)캐스트정보: (02)3453-5148 • (주)한국에픽스: (02)322-3264
 부산 • (주)아이엠비테크: (051)257-7087 • 제니스디지털: (051)638-2210 / 대구 • (주)진명아이앤씨: (053)426-6900 / 광주 • (주)수창미디어: (062)654-2500
 ■ A/S센터 : • (주)참택엔지니어링: (02)784-9912 부산지사: (051)861-5866 • (주)시오인포: (02)786-0433 울산지점: (02)718-0434 • (주)나스텔: (02)780-3040 • 포월: (02)761-9577